

가나 경제 및 에너지 동향 (2022.2.6.-3.11)

1. 경제 및 에너지 분야

가. 가나 주요 경제 동향

- (환율 상승) 가나 중앙은행(BoG)에 따르면 가나 세디화(cedi)가 1월초 기준 1달러당 6.7세디에서 3.11.(금) 1달러당 7세디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및 가나 국가채무 지속 확대 우려로 가나 세디화는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에 의존하는 가나 경제 구조의 특성상 세디화 평가절하는 국민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가나 상인연합회(GUTA) 등은 세디화 가치 폭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 (물가 상승) 가나 통계청(GSS)은 3.9.(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최고치인 15.7%(전월(13.9%) 대비 1.8%p 상승)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주택·수도(25.4%) △전기·가스(21%) △교통(18.3%) △식료품(17.4%)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관찰됨.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촉구)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3.2.(수) 가나 건설산업회 의소(GhCCI)측과의 면담 계기, △가나의 높은 주택가격 △주택 부족 현상 △외국 건설사업자 참여 급증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국내 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확대 및 추가 국민주택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함.

나. 대법원, 2022년 예산안 유효 판결

- 2021.11.30. 국회를 통과한 2022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였지만, 대법원은 3.9.(수) 헌법 102조 및 104조*에 의거, 의장직을 대행한 조셉 오세이오우수(Joseph Osei-Owusu) 국회 제1부의장에 대한 표결권 부여가 타당하며, 138명(과반수)의 의결 정족수

를 충족시켰으므로 2022년 예산안이 유효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함.

* 헌법 102조에 따르면 국회 정족수는 주재자를 제외하고 전체 의원의 3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104조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제1야당인 국민민주당(NDC)측은 동 판결이 전자금융거래 부담금(E-Levy)에 대한 사법적인 지지에 해당한다면, 이 같은 결정이 다당제 입헌 민주주의의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비난함.

다. 전자금융거래 부담금(E-Levy) 부과 관련 동향

- (E-Levy 도입 필요성 강조)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2.28.(월)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전국노동회의(NLC)에 참석, 現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 부담금(E-Levy)은 공평한 세금 징수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가나 경제 혁신, 개발 잠재력 실현,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E-Levy 법안 국회 상정 예정) 알렉산더 아페노마킨(Alexander Afenyo-Markin) 신애국당(NPP, 집권여당) 부대표 겸 국회 경제위원회 의원은 정기국회 재개로 「1.75% 전자거래부담금(E-Levy) 부과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동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3.4.).

라. 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 위험 경고

- 가나 중앙은행(BoG)은 3.8.(화) 현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BitCash, Currency Exchange 등)가 중앙은행의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바, 가상화폐의 유통, 매매 관련 거래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관련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및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함.

마. 4월 청년 창업 지원 시범프로그램(YouStart) 시행 예정

-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재무장관은 정부가 4월부터 아크라 및 쿠마시 지역을 시작으로 높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 지

원 시범프로그램(YouStart)」을 시행한다고 발표(3.2.)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뿐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자본, 훈련, 기술교육,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가나 통계청에 따르면 총경제활동인구 1,150만명 중 약 150만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추산됨.

- 동 프로그램은 가나 기업청(GEA), 국가 기업가정신 및 혁신프로그램(NEIP)이 공동으로 이행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청년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최대 100억 세디를 지원할 계획임.

바. 가나-미국 원자력 협력 강화 추진

○ 가나 정부는 2.25.(금) 미국 정부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FIRST) 프로그램」 하 공동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고, △가나측 야우 오사포마아포(Yaw Osafo-Maafa) 수석장관 및 메튜 프렘페(Matthew Opoku Prempeh) 에너지부 장관, △미국측 스테파니 설리반(Stephanie Sullivan) 주가나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미측은 미 국무부가 주관하는 동 FIRST 프로그램을 통해 가나의 소형 모듈원자로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첨단 기술 협력, 사업 계획·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임.

○ 프렘페 에너지부 장관은 가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구조 개편을 위해 원자력발전공사(Nuclear Power Ghana Limited)를 설립하였다면서, 동 FIRST 프로그램을 통해 가나의 원자력에너지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2. 개발협력 분야

가. LG전자, 가나의 북부지역 개발 위해「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 실시

○ LG전자는 국내 NGO(희망친구 기아대책)와 협력하여 가나 북부 지역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개발 및 자립을 주제로 △교육, △식수위생, △축산 3개 분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각 부문별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각각 6만 세디를 수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동 지역의 △ICT 지원 및 교육시설 개선, △식수 공급 확대, △축산 부문 생산량 확대를 지원할 예정임.

나. 일본, 가나 교육 및 보건 분야에 26만불 규모 무상원조 제공

- 일본 정부는 보노(Bono)주 및 아하포(Ahafo)주 3개 지역의 △교육(교육시설 건설) 및 △보건(보건소 및 보건지소(CHPS)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에 26.9만불 규모의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하고, 관련 업무 협약(MOU)을 체결함.
- 동 사업은 1989년 도입된 일본 정부의 ‘풀뿌리 인간안보’프로젝트 하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17,000여명에 달하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끝.